

[지역발전 추진전략] 최상철 균형위 위원장 "균형발전위→지역발전위로 고칠 것"

입력시각 : 2008-07-21 18:05

—'국가균형발전위원회'의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가 나왔는데,

"참여정부의 지방정책 핵심은 균형분산이었다. 수도권은 좀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가급적으로 지방을 우선 살리자는 방향이었다. 앞으로 이런 제로섬 게임은 안된다. 새 정부 지역발전 정책은 경쟁과 협력, 분권이 키워드다. 그래서 이름도 '국가균형발전위'에서 '국가'지역발전위원회'로 바꾸려 한다. 정기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."

—선(先)지방발전 후(後)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얘기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닌가,

"정책방향은 큰 변동이 없다. 여러 시책을 추진했을 때 지방이 피부에 와닿는 개발이익이 나왔을 때 수도권 규제를 점진적으로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."


—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민영화 일정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,

"지방으로 이전할 공기업을 인수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. 예컨대 가격조정 등이 될 수 있다. (공기업을 유치 못한 지역엔) 자회사를 보낼 수도 있고 사업본부를 분리시켜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."

박수진 기자 notwoman@hankyung.com

- ▶ 혁신도시 속도낸다...이전계획 심의 재개
- ▶ [지역발전 추진전략] 공기업 민영화는 지방이전 조건으로 추진
- ▶ 지방이전기업에 도시개발권 .. 정부, 새만금 10년 앞당겨
- ▶ [지역발전 추진전략] 3개 분야 22개 지방청 연내 이관
- ▶ [지역발전 추진전략] 지자체들 "구체적 계획 빨리 나와야"

• 로또 당첨자들의 비밀스런 공통점!	• 던킨도너츠창업! 월순익 1000만원
• 아파트 3채 마련하는 창업 노하우	• 길운은찾아가고, 액운은피해가자!

 [관련기사 더보기](#)